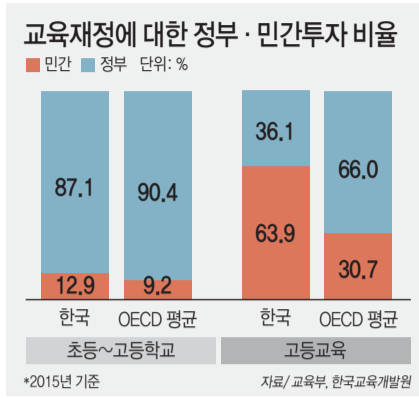


# 대학재정 민간의존도, OECD 두배 '64%'

〈정부-민간 투자 상대적 비율〉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18**  
 정부-민간투자 간 상대적 비율  
 OECD 민간 평균 30%로 정반대  
 교사 인당 학생수 줄었지만  
 초·중고 모두 평균보다 많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민간재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재정의 민간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1일 OECD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교육 재정 GDP 대비 5.8%**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공교육에 투자된 재정(2015회계연도 기준)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5.8%로 OECD 평균(5.0%)보다 높았고, 고등교육 투자 재정도 1.8%로 OECD 평균(1.5%)보다 0.3%p 높았다. 하지만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모두 전년 대비 각각 0.1%p, 0.4%p 감소했다.

특히 대학 등 고등교육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5656달러)보다 크게 낮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 추세**  
 학습 환경 등을 파악하는 지표인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 감소 추세다.

2016년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전년보다 모두 감소했지만, OECD 평균(초 15.0명, 중 12.7명, 고 13.0명)보다는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0년 전(2006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10.2명, 중학교 6.2명, 고등학교 2.1명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초 23.2명, 중 28.4명) 역시 감소했지만 OECD 평균(초 21.3명, 중 22.9명)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임때는 낮았지만, 연차가 높아지면서 높아져 OECD 평균을 넘어섰다. 2017년 기준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3만395달러, 중학교 3만455달러, 고등학교 2만9738달러로 OECD 평균(초 3만2258달러, 중 3만3498달러, 고 3만4943달러)보다 적었다. 하지만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5만3405달러, 중학교 5만3465달러, 고등학교 5만2747달러로 OECD 평균보다 약 4000~8000달러 많았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

주로 OECD 평균과 비슷했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는 다소 많았다.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1위 유지**  
 국민의 교육 접근도 지표인 만 3~4세 취학률은 OECD 평균을 크게 앞섰다. 특히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지난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 87%, 20~24세 50%로 OECD 평균(각 85%, 42%)보다 높았다.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6, 대학 졸업자 149, 대학원졸업자 198이었고, 고용률은 74%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OECD 평균(76%)보다 다소 낮았다. 특히 교육단계별 고등학교졸업자(73%), 전문대졸업자(77%), 대학이상 졸업자(78%) 등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OECD 평균 고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고학력 실업 문제'를 드러냈다.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35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 등 총 46개국 교육지표가 포함됐다. 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올해 12월 중으로 번역본이 발간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정책브리핑

### 고용부 고교·대학 현장실습생 22만명 산재보험 적용

앞으로 고교·대학 수업 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22만명의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직업계고 학생에게만 산재보험이 적용돼 약 6만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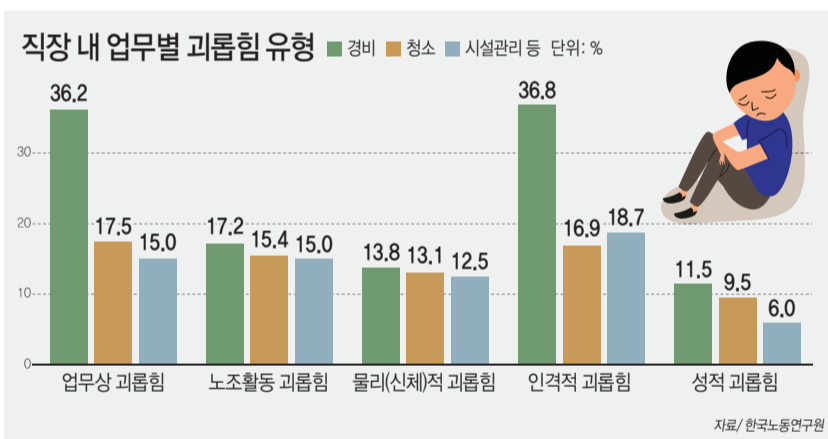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지난 19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 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한정했다. 이후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산재보험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해 지급) 등을 보장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청소·경비 노동자 3명 중 2명 “직장서 괴롭힘 당했다”

**노동연구원 노동자 괴롭힘 실태**  
 1위 21% 해고 협박·업무 괴롭힘  
 비하 발언·이간질·폭행 뒤이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경비·시설관리직에 종사하는 노동자 3명 중 2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비정규직일수록 이런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58.8%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친화적인 대표 직종인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는 서울지역의 23개 기관에서 종사하는 331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역노동자의

성별, 연령별 고용형태별, 업무별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리자들은 '사소한 실수를 핑계로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서 배제'하는 업무상 괴롭힘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응답자의 20.9%로 나타났다.

또한 '비하발언', '노동자 간 이간질' 및 '관리자의 사적인 일을 대행'하는 인격적인 괴롭힘(20.1%)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세번째로 높은 괴롭힘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괴롭힘(16.3%)이었다. '폭행 위협' 등 물리적 괴롭힘은 13.7%였으며 성적 괴롭힘도 1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괴롭힘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는 성적 괴롭힘과 물리적 괴롭힘을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성 응답자는 14.3%가 물리적, 신체적 괴롭힘을 경험한 반면, 남성 응답자는 10.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농식품부 오늘부터 닷새 동안 '북경 K-FOOD FAIR'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2018 북경 K-FOOD FAIR'를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북경 JW메리어트 호텔과 SOLANA 쇼룸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중 농식품 수출은 6억9600만 달러(잠정)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다. 지난 5월 수출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후,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졌으며 중국 시장이 전체 농식품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식품시장은 2016년 기준, 1조 1186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시장(6조 3472억 달러)의 18.7%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 수입액 또한 WTO 가입 후 2002년 103억 달러에서 2016년 1249억 달러로 급증했다.

현재 중국 농식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0.8%에 그치고 있지만 한중 FTA·지리적 인접성·식문화 유사성·소비재상품 최혜국관세 인하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수출상담회에서 수출 업체대상 현지 유통 채널 트렌드 및 시사점 관련 이슈 세미나와 바이어 대상 미래클, 신상품 중심으로 전략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해외바이어와 수출기업 간의 1:1 수출상담회 장을 마련해 수출 업체당 총 16회의 비즈니스 상담을 가질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 동해안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뿌리 뽑는다 이사·택배 등 서비스업도 KS 인증 대상

**해수부 관계기관 협력 방안 논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수획한 불법 어획물.

정부가 다가오는 동해안 오징어 조업 시기를 맞아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뿌리 뽑기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부산웨스턴호텔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는 해수부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관리원,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해수부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먼저 불법

**산업부 4개 업종 신규 지정**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사, 택배, 등 4개 서비스업을 KS(한국산업표준)인증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KS인증제도는 품질경쟁을 통해 양질의 제품(서비스)을 생산(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61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인증 기업은 제품, 포장, 보증서 등에 KS를 표시해 홍보할 수 있고, 정부 조달 시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 받는다.

서비스 KS인증은 2008년부터 KS인증을 시작해 현재는 콜센터, 시설관리, 건축물 청소, 장례식장, 시설 서비스 등 10개 분야 105개 사업장이 인증을 취득·유지하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이사, 택배, 시장·여론조사, 컨벤션 등 4개 서비스업종이 KS인증 분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이사·택배 이용 시 물품 훼손과 분실 등에 따른 분쟁 감소, 시장 및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 컨벤션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KS인증 업체는 조사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조사 프로세스를 통해 양질의 조사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응답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도 힘쓰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